

2004년 6월 29일 오전 9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면담

일시 : 2004년 6월 29일

장소 :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대사관 측 면담자 : 산업자원관 백두옥

한국엔지오 참가 : 이귀보, 모경순, 정국희, 김민정, 이상아, 최미경, 야디

(백두옥 산업자원관은 '백' 한국팀 엔지오참가자는 '엔'이라고 표기)

백 : 현재 대사관에는 18명이 근무 중이다. 산자부, 건교부, 산림청, 경찰청, 국제홍보 등 관련부처에서 각 1명씩 나와 있고 나머지는 외교부에서 대사, 경사, 참사, 서기관을 보낸다.

인도네시아의 한국교민은 약 3만명이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봉제, 섬유 가발, 신발, 화학, 전자, 신발부품, 해운, 자원개발 등. 전자 쪽은 삼성과 엘지가 양대축을 이루고 있고 이 둘 대기업의 협력업체 60~70개 업체가 함께 진출해 있다(부품 등) 약 600개의 한국기업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인이 기업주라고 해도 파악이 안 된다. 전자업체는 500~1,000명 가량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봉제공장의 경우 1,200~2,000명(과거), 800~1,000명(현재) 고용한다.

나(백두옥)는 대사관에서 주로 한국 기업 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경우 한국인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것은 87년 이후 본격화 되었다. 90년대 초까지 노사분규의 요인은 '인권'이었으나 최근에는 '임금'문제로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단체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금, 장기근속금, 주택의료지원금이 의무화되어있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전별금도 받을 수 있다. ILO가 규정한 것 이상의 노동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식민지 영향으로 일찍이 서양의 법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엔 : 인니 한국기업들이 빚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 기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던지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생리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던지...등등?

백 :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엔 : 대사관은 한국사람, 즉 기업주들만 접촉하기 때문에 현지 노동자들의 고충과 노동탄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조건 한국인이라고 편드는 것이 대사관이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이 과연 한국인을 안전하게 하고, 한국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다. 한국은 최근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 테러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 대한 악감정들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한국 교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한국기업들이 현지인들과 협력하고 인정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다.

엔 : 인도네시아 한국기업들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특히 가와산 지역에 한국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그만큼 문제가 많다. 건장한 사람을 고용해서 인니 노동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랑 지역에서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서 병가를 내어 쉬고 있는 노동자집에 한국인 직원들이 찾아와 진짜로 아픈지 확인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백 : 인도네시아에서 실업자가 4,000만~4,500만 명에 육박한다. 현 정부는 고용촉진정책도 대책도 없다.

엔 : 산업연수생 관련해 대사관비리가 언론에 심심찮게 게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근절 대책은?

백 : 산업연수생의 경우 대사관은 비자발급의 역할만 한다. 비리가 생길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인도네시아 해외고용개발청이 인력을 선발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에 구직자 명단을 보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사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비리가 발생할 수 없다.

엔 : 인도네시아가 MOU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 : 인도네시아 MOU체결이 늦는 것은 외교부와 인력이주부 사이에 약간의 알력다툼이 있는 것 같고, MOU서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외교부는 인니정부가 해야된다고 하고, 인력이주부는 해당부서(ministry)가 해야 한다며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한국정부와 인니정부 사이에서 교섭역할을 하고 있지만 MOU체결 이후에는 양국 간 특별한 분쟁이 없는 한 고용허가제 관련하여 역할이나 개입할 꺼리가 없다.

엔 : 한국정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자진출국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백 : 자진출국자 우선권부여문제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

엔 : 고용허가제 하에서 입국 전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백 : MOU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엔 : 한국의 노동법, 사회문화, 한국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절차 및 도움 받을 상담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엔 : 인니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기업은 투자 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지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OECD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법을 준수해야만 투자할 수 있다는 방침 같은 것에 대해서 고용주들이 미리 교육을 받도록 해 달라. 면담 감사하다.

필리핀

2004년 7월 2일~4일

<필리핀 까비떼>

워크숍 : “필리핀 한국기업 노동자와 한국 활동가의 연대 강화” “Building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for Filipinos and Korean Activists”

일시 : 2004년 7월 2일~4일

장소 : 까비떼 WAC (Workers' Assistance Center, Inc.)

date : July 2~4, 2004.

venue : Workers' Assistance Center (WAC),
Rosario Cavite, Philippines

7월 2일

- 까비떼 수출자유지역(EPZ : Export Processing Zone) 둘러보기
- WAC 지부에서 필리핀노동운동상황 설명 듣기, 노동운동 비디오 시청
- 골프장 노동자들의 노조회의(Eagle Ridge golf Workers' Union) 참관

7월 3일

워크숍 (Day 1)

<진행 순서>

- 참가자 소개 :

SCW(Solidarity of Cavite Workers 까비떼노동자연대) 회원들,

대영 어패럴·청원·필스존 노조원들 및 노동자들

WAC 활동가들, 한국 측 참가자

- 발제 : EPZ, WAC 소개 - 세실

- 노동자들 증언

- 그룹 토의

(한국기업내의 상황과 문제점 토의하기/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 그룹토의 결과 발표

- 발제 : 노동자의 인권침해 감시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차미경

EPZ와 WAC 소개

Cecile (세실, WAC 활동가)

WAC(Workers' Assistance Center, Inc.)는 까비떼 EPZ(Export Processing Zone, 수출자유지역) 안에서 조직화와 법률적인 지원 프로그램, 리더쉽 트레이닝, 연대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까비떼 수출자유지역 안에는 한국, 일본, 대만 자본의 회사가 421개 있다. 대부분 18~21세의 여성 노동자들이며 나이 든 노동자들은 대부분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까비떼는 다른 농작물이 재배되던 농경지가 정부에 의해 산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지방 정치인들은 "No union, No strike policy"를 주장하며 노조 조직을 막아왔다.

이 정책은 노조탄압과 노동자탄압 등의 인권침해를 일으켜왔다. 다른 문제는 저임금이다. 하루에 237페소를 받고 있다. 생활비는 임금보다 훨씬 비싼 게 현실이다. 많은 회사들은 이 237페소마저 지키지 않고 있으며 160~170페소를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초과근무이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같은 복지 시설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해 이곳의 노동자들은 건강이 나쁜 상태이다. WAC에서는 많은 작업현장과 연관된 질병으로 간질환, 폐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감시하고 있다.

노동자 증언

GAP를 생산하는 KOSIPHIL와 CID의 노동자 증언

KOSPIL의 고용안정을 피하기 위한 이유로 당시의 직원들은 CID로 전환됐다. 당시 노조가 점점 강해지자 회사는 부도를 냈다. "Overnight - Over day"이라는 한 달간의 초과근무에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1천명이상의 직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나중에 회사는 다른 공장을 세웠다. 그래서 노조는 조직화를 시작해 노조회원을 늘렸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에 참여했거나, 노조의 회원인 경우 폭행을 당했다. 공장안에는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기업윤리강령(a code of conduct)이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으며 퇴직금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그룹토의 : Group Discussion

- 토의 주제 1) 공장안의 환경과 문제점에 대해 나누고 토의하기
2)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② 어떻게 감시활동을 할 것인가

<토의결과 발표 : Group Discussion Report>

필리핀 노동자들과 한국 참가자들이 한 그룹에 속하여 각 공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얘기하였다.

* Group 1

- 쿼터 시스템
- 강제노동
- 부대비용 미지급 - 이를 임금에서 삭감한다. EPZ에서는 10%이상을 삭감한다.
- 노조회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정신적 육체적으로 폭행을 당함.

* Group 2

- 청원 / 필스존 노동자들
- 긴 휴업기간
 - 긴 초과근무시간
 - 산재 무보상
 - 대량해고
 - 노조회원에 대한 폭행

가능한 Action

- 노동자들간의 연대 강화
노조강화와 연대
가가호호 방문으로 노조회원 가입권유
지속적인 교육
- the Certificate Election(노조인정투표)에서 이기기 위한 투쟁 계속

* Group 3

대영 어패럴(Dae Young Apparel)
필스존 Philsjeon(193명 근무) 노동자들

문제 Problem

- 하청기업
 - 긴 휴업기간
 - 대체노동
- 노동자에 대한 폭행 계속하고 흑색선전과 선동을 함 - 이는 노조를 없애기 위한 전략을 진행 - 만약 노조가 승리할 경우, 작업이 없고, 공장은 중국으로 옮긴다는 협박
- 노조가 없다면, 더 많은 작업량이 있을 것이고, 휴업기간이나 대체업무는 없을 것이다.

대영어패럴

- 2번에 걸친 선거 실패, 곧 다른 선거가 있을 예정
- 친노조노동자와 반노조 노동자들을 구분하는 관리

- 노조대표에 대한 차별

* Group 4

노동자들 소속회사 : 대영어패럴 Dae Young Apparel
필스존 Phils Jeon Garments
청원 Chung Won

Problems

하청에 의한 긴 휴업
노조 탄압
높은 쿼터
무차별 해고

Actions

- 회사 상대로 제소
- 노동자 교육
- 노조조직
- 노조회원을 위한 교육 지속
- 가가호호 방문

* Group 5

필스존 Phils Jeon 노동자들

- 저임금
- 초과근무에 낮은 임금 -20시간 근무에 15시간 임금 지급
- 열악한 근무 환경
- 무임금 휴업
- 부대비용을 임금에서 삭감
- 쿼터 증가 (from 1500 to 2,500)
- 강제 초과근무

7월 2일 발제

노동착취에 대항하는 감시와 행동

Monitoring & Ac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Labour Rights

차미경 (아시아다국적기업감시 네트워크 활동가,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Presented by Serapina Cha Mikyung

오늘날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노동현장의 상황은 노조탄압 등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어떻게 풀리핀 단체와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의 단체들이 사업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시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맞서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첫 번째로 까비떼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모기업을 파악해야 하고,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강제노동, 초과근무,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단체협약), 노조탄압 등은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한국도 OECD 가입국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송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OECD의 National Contact Point(국내연락사무소)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리고 TUA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OECD의 노조자문위원회, OECD 회원국의 노조라면 제소할 수 있다)를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봉제산업에서의 쿼터 시스템은 가장 악제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WTO가 홍콩에서 열린다. 봉제산업 노동자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까비떼는 큰 봉제공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왜 일찍 이런 워크숍을 조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회가 처음이다. "자본이 노조를 죽이고 있다" 이런 상황아래 작은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씩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은 한국에서는 한국 내 모기업의 목록을, 까비떼 내의 기업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7월 3일 평가회

- * 임성희 : 자본의 공격력과 이전력에 놀랐다. 시각을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넓혀야겠다는 생각이다.
- * 김민정(부산) : 필리핀 참가자들보다 한국 측 참가자들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문제점 설명에 치우쳤다. 우리는 연대의 한 방법으로 모기업 노조와 가비데 현지노조와의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
- * 마크 :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쿼터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놀랍다. 자본가들의 방법은 교묘하게 변하고 있고, 필리핀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든다.
- * 이상아 : 노조의 희망과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을 보며 앞으로의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한편, 복잡한 생각이 든다.
- * 이귀보 : 분위기는 좋았지만 그룹 토의의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 이지연 : 분위기는 좋았지만 한편으로 한국기업의 몰상식성을 느꼈다.
- * 모경순 :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황이 더 열악하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 * 이영아 : 노조의 필요성과 역할을 느끼며 활동하는 노조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 * 정귀순 : 차미경 씨의 마지막 정리부분이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교육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교육적 부분이었는데 시간에 쫓겨 짧게 끝난 것이 아쉽다. 시간상으로 진행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 따갈로그와 한국어 통역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국 측을 배려해서 영어를 쓰는 게 이해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좀더 향상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최미경 : 같이 참여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기회는 국제 민주연대나 WAC가 처음으로 갖는 워크숍이다.

7월 4일 워크숍 (Day 2)

진행순서

- 8:30- 9:30 필리핀 노동운동 - 마니
- 9:30-10:30 한국의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운동 - 정귀순
- 10:30-11:00 비디오 <Stop Crackdown> 시청 / 휴식
- 11:00-12:30 그룹토의 / 발표
- 12:30-13:30 점심
- 12:30-14:00 문화공연

발제 : 필리핀 노동운동

마니 (SCW 활동가)

필리핀 102년의 노동운동은 스페인 식민지시대부터 시작된다. 1902년 5월 1일에는 100,000명이 참가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1972년 9월 21일 마르코스에 의해 'Martial Law'가 선포되고 이로써 파업금지, 집회금지, 시위금지 등의 금지조항이 시작된다.

1974년 마르코스는 TUCP(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노동조합회의)라는 황색노조를 만들었다. 이 황색노조는 Old yellow union - TUCP / FFW(Federation Filipino Workers)와 New yellow union - BMP / KKMI / APL 등이 있다.

까비떼안에서는 1982년 첫 번째 파업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까비떼 노동자들의 경험으로 볼 때, 반노동정책이다. Martial Law로 인해 모든 사업장의 노조는 불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계속 투쟁하고 있는 상태이다.

1980년대 정부는 까비떼를 농업지역에서 산업지역으로 바꾸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다. 1983년 에는 많은 노조 운동이 실패를 경험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1995년, IMF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업이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삭감, 산재 무보상 등의 어려움이 닦쳤다. 당시, 노동자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1995년 노동자들은 SCW에 와서 노조결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성하기 시작했다.

1995년 이전에는 KMU(5·1 메이데이운동 Kilusang Mayo Uno 이라는 필리핀어의 약자. 노조총연맹 조직)가 까비떼 공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SCW는 단순한 단체였으며 WAC가 조사를 시작했고, 조직을 시작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노조조직이 가능한 시기였으며 노동자들 또한 공장 안팎에서 시위를 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단은 "NO Union, NO Strike"라는 정책이다.

현재 공단 안에는 4개의 노조가 조직돼 있다.

7월 4일 발제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과제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1.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1)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의 출발

오늘날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은 1987년 7월,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투쟁과 함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대투쟁으로 출발한다. 1960년 군사쿠데타 이후 장기 집권했던 군사정권 하에서의 한국의 노동자들은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그 어떤 요구나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주적인 노동조합 조직이나 노조활동은 단순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넘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의 정치적 탄압에 이르는 과도한 탄압을 받았다.

70년대와 80년에 이르는 황색노조의 민주화과정, 노동조합 조직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구속되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그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발전의 대표산업이었던,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의 활동이 주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

87년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투쟁과 함께 20여 년에 걸쳐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요구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고, 노동조합이 없었

던 많은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형식적으로만 노조가 존재하던 사업장의 노조를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만들려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발족했고, 1995년 11월, 민주노조의 내셔널센터인 민주노총이 40만 명의 조합원으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 현재 한국은 두 개의 내셔널센터가 존재한다.

◆ 한국노총(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 FKTU)

과거 군사정권시절 노동자의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출발한 조직으로(소위 황색노조)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존재의 위협을 받게된 한국노총은 생존을 위해 개혁적인 내용과 활동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민주노총과 경쟁관계 속에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3,374개 노동조합 / 940,774명의 조합원 (2002.12월 기준)

◆ 민주노총(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TU)

87년 정치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계급을 대변하고자 출발한 민주노조의 전국연합체

전국 854개 노동조합 / 620,812명의 조합원 (2003.12월 기준)

2. 한국의 경험 (마산수출자유지역과 경제자유지역)

● 마산수출자유지역 (1970년~)

1)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설립과 현황들

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출발

한국은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국민들의 지지

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소위 경제개발5개년 계획) 개발 초기에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수출지향정책을 채택했고, 70년대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심지로 1970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의 저렴한 유희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여 수출을 늘리고, 고용확대, 기술이전 등을 기대한 것이다.

② 외자의 내용과 입주기업

- 1970년 1월 1일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공포한 후, 1970년 4개 업체가 입주를 시작하여, 1974년 115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점을 이루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 1980년 88개 업체, 1990년 72개 업체, 1995년 7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심은 일본인 투자기업들로, 1971년 20개사 전체의 90.9%, 1975년 95개사 90.5% 1980년 86.3%, 1985년 70.9%

80년대 이후 일본기업이 투자비율이 점차 줄고 한국기업의 투자비율 증가했다.

③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변화

▶ 객관적 요인

- 초기 저임금 노동집약산업(전자, 신발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으나, 1974년 1차 오일쇼크와 2차 오일쇼크로 투자 위축된 점

- 한국 내 산업발전 및 건설업의 중동진출로 저임금 유희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한국보다 저임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국 등지로 외자기업이 이전

▶ 주체적 조건

- 수출자유지역 내 입주기업체는 노동쟁의조정법 중 공익사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쟁의를 사실상 봉쇄하였지만, 1980년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1986년 12월 노동계의 반발로 「외국인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1 제정)이 폐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결성의 물결 등 노사관계의 큰 변화

2)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 한국정부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내 입주기업체는 노동쟁의조정법 중 공익사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쟁의를 사실상 봉쇄하였다.

- 80년대 이후 수출자유지역은 감원과 휴폐업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조결성 등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였다. 1986년 12월 노동계의 반발로 「외국인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1 제정)이 폐지될 때까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과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다.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결성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조가 가장 활발하게 조직된 87년~89년 사이 노조가 결성된 일부 업체들이 폐업 혹은 노조해산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1987년 21개 업체에서 노조결성, 7개 업체 폐업 혹은 노조해산

1988년 14개 " , 5개 업체 "

1989년 5개 " , 1개 "

1970년~1995년 25년간 전체 72개 업체 중 31개 업체에 노조결성(43% 조직률), 전체 노동자의 63.4%가 조합원으로 가입

- 위장폐업을 한 TC노조와 수미다노조의 개별투쟁에 대한 반성 이후 외자기업노동자 전체가 함께 투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89년 '다국적기업특별위원회'의 재가동으로 외자기업의 감원과 휴폐업 시 노동위원회의 사전심의회와 절차강화, 보상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등 감원·폐업방지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특구법, 2003. 7~)

1) 경제특구법의 배경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운동의 탄압의 대명사이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특례법의 폐지로 현재 사실상 다른 지역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마산창원지역의 활발한 노동조합운동과 동일한 선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 한국은 1970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IMF 구제금융의 프로그램에 가장 충실하게 따른 국가 중 하나로,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개방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집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2년 11월 6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구체적인 내용

"이 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중>

- 이 법의 적용대상 기업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으로,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 내 상장기업 주식의 35%가 이미 외국인 소유상태인 만큼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들을 포괄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197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을 비롯하여, 월차휴가폐지, 주휴와 여성들의 생리휴가 무급화를 통해 임금 18~20% 삭감효과를 내서 결국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로조건을 악화하고 있다.

- 장애인의 의무고용면제, 파견노동자의 대상업무와 기간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지역 노동자들을 차별하게 되며, 장애인 및 고령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을 침해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와 병원 설립을 허용하여 공공영역에 남아 있어야 할 교육과 의료의 시장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감면 뿐 아니라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시켜 한국 내 환경관련법안 34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어 환경파괴를 유인하고 있다.

3. 한국의 노동운동의 현실

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의 노동조합운동

1997년 말 한국은 경제위기를 IMF 구제금융으로 넘기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집행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공격적으로 추진된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투자협정, 경제특별구역지정 등 초국적 자본의 유치, 과보호 조치들로 하여 노동기본권이 크게 제약되는 한편, 환경, 교육, 여성 등의 영역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정리해고자를 양산하여 무수한 가정들이 파괴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여 고용불안정을 증대시켰다.

2)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 현상 심화

① 실업률 증가

- 실업률 : 3.4% (청년실업률 : 7.7%)
- 경제활동 참가율 : 61.4%
- 취업률 : 59.3%

② 비정규직 노동자 수 증가

- 1993년 491만 명(41%) 2003년 713만 명 (50%)

③ 임금격차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확대)

- 500인 이상 고용된 업체 노동자의 임금 100 :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65.9%
-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100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2002년 51%
- 시간당 임금 남성 100 / 여성 62%

3)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1987년 6월말 11.7% → 12월 말 13.8% → 1989년 18.6% (최고치) → 2003년 12월 11%로 하락

원인으로는,

- 조직률이 높은 제조업이 위축되고 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대 (현재 전체 노동자의 약 60%에 이른다)
- 노동자 의식의 보수화 :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개인주의적 경향이 확대

4) 노동자들의 의회진출로 정치세력화의 진전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 오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투쟁을 이끌어 왔다. 특히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출신의 1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출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4.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1)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고민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중조직이지만,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조직구성과 임금인상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투쟁에 매몰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2) 과제

- ▶ 신자유주의에 맞서 계급적 연대 및 사회적 연대
 - 노동자 내부의 차별과 분절 극복
 -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차별극복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정규직노동자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조직화
 -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 ⇒ 주5일 근무실시와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 사회개혁에 적극 참여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 ⇒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치경제적 개혁을 위한 노력
- ▶ 아시아 노동자들의 연대
 - 국적을 초월한 기업들의 이윤추구는 국적을 초월한 노동자, 민중들의 연대가 아니면 결국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의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의 과실을 나누어 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 노동조합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에 살 것인가, 또 그 사회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를 정립해 나가

지 않으면 결국 자본의 파트너로서만 남게 될 것이다.

3) 2004년 민주노총의 임금인상투쟁과 단체협상투쟁의 주요 요구사항

◆ 임단협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주5일 근무 전면실시와 일자리 나누기
- 최저임금 인상과 연대기금 쟁취
- 산별교섭 쟁취

◆ 제도개선, 사회개혁

- 이라크 파병철회, 파견법 개악 철회
- 교수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 FTA 중단,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확대

Korean Labor Movement, Experiences and Tasks

By Jeong Gue-sun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Busan, Korea)

1.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in Korea

1) Korean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setting up

Beginning of Korean democratic labor movement today is derived from July 1987, the great struggle of workers, accompanying with Korea's political democratic struggle. Korean workers then under a dictatorship regime, which had seized the power since early 1960's by a military coup, couldn't have any action or demanding for their rights. The government didn't allow collective rights to organization, bargaining, and action. Indeed, as South Korea hadn't have the freedom to thought becaus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by North and South or pro-soviet block and pro-USA block, any kind of actions sympathy to workers was considered as pro-socialism movement by the government; the actions for independent trade unions brought harsh suppressions by the government.

In 70's and 80's, during the age of yellow unions' democratizations and organizing new trade unions, numerous workers had been fired or even died. Hence, Korean democratic trade unions movement was constructed on the cost of many workers' sacrifices. Particularly, many women workers who had worked at the Korea's representative light industries such as textile,

sewing, and shoe making had played very important roles.

Along with democratic movement against dictatorship military regime, voices of demands by workers who had been suppressed for the past twenty years were cried out like volcano eruptions, many new trade unions were organized, and there were vivid activities to change the management-controlled unions to democratic and independent unions.

As the result, Jeonnohyeop or the National Association of Trade Unions was organized in January 1990,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launched in November 1995, has been in active so far.

2) Korea has two national umbrella organizations of trade unions

◆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 FKTU

An organization not for workers but for controlling workers in the military regime, has been adopting reformative activities since 1987, as there was the great workers struggle and launching of KCTU. On the line of competition with KCTU, it has been gradually changed.

It contains 3,374 trade unions and 940,774 union members as of December 2002.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TU

A national umbrella organization of trade unions on behalf of workers' class, which was setting up since workers' great struggle in 1987.

2. Experiences of Korea (Masan Free Trade Zone and Free Economic Zone)

● Masan Free Trade Zone(since 1970)

1) Establishment of MFTZ and situation of today

① Beginning of MFTZ

Since military coup in 1960, Park Jung-hee military dictatorship regime has exerted efforts to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get support of the people. At beginning of the planned economic development era, Korea adopted the export driving policy on the basis of low-wage. In the early 1970's, Korea turned to enforce export centered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as the result, Masan Free Trade Zone was constructed. Korea expected export hiking, employment increasing, and technology transportation into Korea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by exchange of Korea's supplying low-waged labor force and social infrastructure.

② contents of foreign investment capitals and enterprises settlement

Since the Act of Free Trade Zone was enacted on January 1st 1970, four plants were constructed in MFTZ at the first year, and the number was peak in 1974 as totally 115 plants were operated in 1974, and then, it has been decreasing, the number dropped to 72 in 1990, and 73 in 1995.

Most venture capitals are Japanese enterprises; 20 plants of 90.9% in 1971, 95 plants of 90.5% in 1975, 86.3% in 1980, and 70.9% 1985 were invested by Japanese capitals. Since 1980's, the Japanese capitals' ratio has been in decrease, while Korean capitals

increase.

③ Changes in MFTZ

▶ Objective conditions

The plants operated in the beginning period was generally low income based labor intensive industries (i.e. electronics, shoemaking etc.), but the capitals' investment was shrink at the Oil Shocks in 1970's.

Because of Korean domestic industries'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companies advanced to the Middle East, there were workforce shortage and wage increasing, and, foreign investors moved to out of Korea including China as the countries had merits of opening policies and low waged workers.

▶ Subjective conditions

The companies in the free trade zone were prohibited from labor disputes according to the regulation upon public industries in the Labor Mediation Act. Despite, there had been outlawed struggles by workers in 1980's, and consequently, the 'temporary provision upon trade unions and labor dispute mediation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was abolished in 1986 owing to rejections by the labor camp, and the employers-employees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since 1987 workers' great struggle.

3) Workers' organizing and struggle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the Korean government inherently banned labor disputes at the companies in MFTZ by adopting the regulation upon public industries in the Labor Mediation Act.

In 1980's, in MFTZ, workers' basic rights were threatened because of huge dismissals, closings, and suppressions to democratic unions. Up to December 1986 when the 'temporary provision upon trade unions and labor dispute mediation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was abolished, the provision was a tool to suppress workers' struggles and organizing their trade unions.

Since workers' great struggle in 1987, there has been a big bang of organizing new trade unions. However, during the period when many unions were newly organized in 1987~1989, some existing unions were disorganized due to their companies disguised closings.

In 1987, 21 new unions were organized, and 7 unions were disorganized or their companies were closed.

In 1988, 14 unions organized, 5 disorganized or closed.

In 1989, 5 organized, 1 disorganized or closed.

For 25 years from 1970 to 1995 in 31 companies out of all 72 companies, trade unions had been organized (organizing ratio is 43%), and 63.8% of total workers were joined as union members.

By reflecting the cases of unions of TC and Sumida that struggles by separated companies were not effective, the 'special committe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as functioned again in 1989. Movements to enact 'the prevention law against dismissals and close down', which stipulated that the labor committee should examine and check process, and the basic standard should be set when foreign investors had closings or dismissals of employees.

● Act of Free Economic Zone (enacted in July 2003)

1) Background of FEZ

Masan Free Trade Zone, symbol of the worst working conditions and suppression of labor movement, has no more special meaning than other region in Korea as the special provision was abolished, but exists as a part of vigorous labor movement in Masan and Changwon area where one of the places where labor movement has been mostly active in Korea since 1987. However, Korea today is trying to resurrect MFTZ in 1970's.

Korea since late 1997, one of the best model countries that followed the bailout funding programs provided by IMF, has positively introduced neo-liberal policies and has implemented privatization process of public corporations, active opening of capital market. As one of the actions, the

'Act for placement and regulations of free economic zone' was passed at parliament on November 6 2002,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July 2003.

2) Concrete contents

"This act is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foreign investing companies' environments of management and living, and of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on power... " (Part of article 1 of the law, purpose)

This act is applied to the 'companies invested by foreigners', which means that more than 10% of stocks are owned by foreigners; the companies can be planted generally in the

international airports or international port areas such 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usan New Port, and Gwangyang Port, however, actually almost all of Korean governments can be covered by the law as already 35% of stocks in the Korea's domestic stock market are owned by foreigners.

Similar to foreigners' invested companies in MFTZ in 1970,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by workers in the companies in EFZ are regulated, and the allowances for monthly leave, weekly leave, and leave for women workers' menstruation are not allowed, the workers' actual salaries are reduced by 18~20%, so that the working conditions are severely worsened as the workers suffer from long time workings.

As employing duty of disabled persons is exempted, and temporarily dispatched workers' jobs and period can be varied and extended by willingness of employers; the workers working in FTZ are discriminated from ordinary workers out of FTZ, and the law is violating the Constitution guarantying equality of all people, as it infringes the right to work upon disabled and aged people.

By allowing establishment of schools and hospitals in ETZ invested by foreigners, it boosts education and medical factors into private completion from public sectors.

As the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EFZ are exempted from taxations such as enterprise tax, income tax, and even the environment tax that is attached to constructing a plant, the law make 34 Korean laws related with environment in vain, and leads destructions of environment.

3. Situation of Korean Labor Movement

1) Trade union movement under Neo-liberal movement

Since the late 1997, Korea, barely has overcome her economic crisis thanks to IMF's bailout funds, actively adopted and enforced neo-liberal economic polices. On the slogan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the neo-liberal policy under the slogan of so-called 'the good country for management' that has been implemented offensively, along with opening the capital market, the transnational capitals have been in inflow. So, basic labor rights have been restricted and there have been a lot of negative effects on the categories of environment, education, and women.

Aftermath is, * many families have been broken on the result of massive lay-offs, * economic inequality has been deepened, and * employment instability has been worsened because many regular workers have been changed to irregular (temporarily hired) workers.

2) Deepened gap between different labor classes

① Unemployment rate hikes

- Unemployment rate : 3.4% (youngsters' unemployment rate : 7.7%)
- Rate of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61.4%
- Employment rate: 59.3%

② irregular workers increased

- 4.91 million irregular workers (41% of total workers) in 1993 was increased to 7.13 million (50%) in 2003

- ③ wage gap deepened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male and female have been deepened)
- Average wages comparing by workers at companies hiring more than 500 employees and at companies hiring fewer than 100 employees is 100:65
- Average wage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is 100:51
- Wages per hour: male 100:female 62

3) Organization rate of trade unions for all workers downed

11.7% in June 1987 → 13.8% November 1987 → 18.6% 1989 (peak)
→ 11% December 2003

Causes are

- Industrial structure is changed; manufacturing industry is decreased and service industry is increased - more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end to organize their unions than workers in the service industry.
- Rapid increase of irregular workers (about 60% of total workers)
- Workers' consciousnesses are being conserved ; economic inequality is deepened, and individualism is extended.

4) Workers' politicization by advancing to parliament

Since workers' great struggle in 1987, Korean labor camp has struggled not for enhancing live qualities of workers but for changing of Korean society more progressively. In 2004, 10 members of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was elected as

lawmakers so that it made a big achievements for politicization of working class.

4. Tasks of Korean democratic trade unions

1) Issues of democratic trade union camp

KCTU, the most influential people's organization in Korea, though, its considerations now are: as members are generally workers in the big companies, it doesn't represent the situations of workers in the small companies, and, how to escape from economic interest oriented struggle such as struggles for wage raising.

2) Tasks

- ▶ Classical solidarity and social solidarity against neo-liberalism
- Overcoming discriminations and divide among workers' class
- ⇒ overcoming discriminations between workers at big and small companies, male and female workers, Korean and migrant workers.

Resolving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and systematically improvement of changing irregular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Protecting and organizing migrant workers

- Reducing working hours and expanding vacant jobs
- ⇒ implementation of five days work per week and creating

employments by reducing real working hours

· Enhancement of political influences or workers through participation of social reform

⇒ workers' political identifications are determined through activations with Democratic Labor Party, and workers endeavor for socio-political reformation.

▶ Solidarity of Asian workers

Without solidarity of international workers and people, enterprises' pursuing of interests over national borders will result that the workers in the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will take fruits from labor exploitations upon workers less developed countries economically.

▶ Unions determine their identities

If trade unions only act on behalf of union members' interests without setting their own issues why do they exist in the society, how do they act for the society, they will be left only as partners of the capital.

3) 2004 KCTU's main demands for struggles for wage raising and collective bargaining

◆ at collective bargaining

- Discriminations against irregular workers should be abolished and they should be changed to regular workers

- Implementation of five days work per day, and job sharing

- Minimum wage raising and obtaining solidarity fund

- Federations should do collective bargaining

◆ reformations of system and society

- Korean troops should not be dispatched to Iraq, and revision of temporary workers dispatching law should be deterred.

- Proving basic labor rights upon professors and government officials

- FTA stoppage, countermeasures for industry vacant

- Reformations of tax system,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system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운동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1. 이주노동자의 현황

이주노동의 문제는 국가와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는 한,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과 국가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과 국가로 향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며,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은 노동력이 싼 지역을 찾아서 자유롭게, 또 값싼 노동력을 자유롭게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비롯한 삶의 조건이 하락하는 것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삶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세계 곳곳으로 아시아 민중들이 이주노동을 떠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의 이주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60년대와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중동 등지에 건설노동자를 보내 달러를 벌어들였던 전형적인 인력수출국이였다.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80년대 말부터는 소위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치자 제조업과 건설업, 수산업에 외국인력의 도입이 시작되어 한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심한 노동강도를 피해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던 중소기업에 자연스럽게 취업하게 되어, 현재 약 4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취업 중이다.

◆ 이주노동자의 체류현황

2004년 2월 현재 한국에 이주노동자는 약 40만 명이 체류 중이다.

2003년 7월 30일 이주노동자에 대해 새로운 제도, 고용허가제의 입법으로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합법화 조치가 취해졌다.(한국체류 4년 미만인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 합법화 조치가 취해지기 전 2003년 8월, 미등록노동자는 전체의 80% 약 30만 명, 합법화 조치가 취해진 후 2004년 2월 현재 미등록노동자는 전체의 34.8%인 약 14만 명이다.

<표12 : 연도별·체류자격별 이주노동자 수>

출처 : 노동부 (단위 : 명)

	전 체	등록노동자 (취업비자)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 (불법체류자)
1990	21,235	2,833	0	18,402
1995	128,906	8,228	38,812	81,866
2000	285,506	19,063	77,448	188,995
2003.8	358,000		52,000	306,000
2004.2	374,000		59,000	139,000

이주노동자의 출신국은 세계 95개국이며, 다수는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특히 산업연수생은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17개국으로부터 인력송출이 이루어지고, 고용허가제는 필리핀을 비롯한 8개국으로부터 인력송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이주노동자 현실

1) 한국의 이주노동자 기본정책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의 기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내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직종에 한해 외국 인력의 고용을 허용하는 보완성의 원칙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단기로테이션 정책

셋째, UN의 이주노동자조약에서는 가족의 동반을 허용토록 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가족 초청을 허용하지 않는 단신노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장기체류 및 정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

■ 한국에서 외국 인력의 도입은 1991년 10월 26일 해외합작 및 투자기업의 현지 고용 인력만 들여오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시작되었다.

■ 3D업종의 인력부족 때문에 한국정부는 1994년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연수협력단 주관으로 아시아 11개국, 27개 송출업체로부터 연수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광범위하게 연수생이 도입되게 되었고, 현재의 연수생제도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 96년 전국의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 네트워크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으로 국회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폐지와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을 위한 활동 시작했다.

■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법무부는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등록노동자에게 자진 신고하면 2003년 3월 31일까지 출국을 유예하고, 6월 이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미등록노동자의 93%인 25만 5천명의 미등록노동자들이 자진 신고하였다.

■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가 국회 통과하여 제도개선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

리던 산업연수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병행실시를 결정하여 그 취지가 다소 퇴색되었다. 오는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필리핀을 비롯한 8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 체결 및 인력도입시스템 준비 중이다.

■ 고용허가제 입법과 함께 한국체류 4년 미만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2005년 선별합법화 조치를 취하여, 전체 미등록노동자 중 80.9%에 해당하는 184,199명이 합법화되었다.

3)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① 왜곡된 제도 — 노동자는 없다

그 동안 한국에 이주노동자의 신분은 크게 ‘연수생’과 소위 ‘불법체류자’로 구분되었다. 즉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생은 지정된 연수업체를 벗어날 수 없는 제약으로 감금노동이나 임금압류 등 사실상의 노예노동에 가까운 상태에서 일하게 되고, 미등록노동자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월급을 못 받거나 일을 하다 다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임금을 못 받아 노동부를 찾은 한 베트남 출신의 노동자는 ‘불법체류자 주제에’ 노동부에 신고한 것을 패섬하게 여긴 기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날, 경찰을 대동하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이 베트남 노동자를 경찰에 넘겨 강제 출국토록 만들었다. 임금을 체불한 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으러 온 베트남 노동자는 강제출국이라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것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적으로 인권침해와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②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외국 인력 정책

지금까지 한국의 합리적이지 못한 이주노동자정책은 결국 아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조장해 왔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과도한 입국경비 및 송출비리와 짧은 취업기간

한국취업을 위해 최소 3,000\$에서 많게는 10,000\$ 정도의 비용이 송출기관 혹은 관련 브로커에게 지불된다. 대부분 친지나 은행으로부터 입국비용을 빌려 한국에 취업을 한 이주노동자들은 월 70만원~90만원(600\$~750\$) 정도의 저임금으로는 (연수생들은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입국한 연수생들의 경우 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취업을 위해 지불한 경비반환과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적립은 정해진 3년의 취업기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연수업체의 열악한 근로조건

연수생들의 업체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담보로 한 연수업체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다른 요인이다. 업체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분증 압류, 임금압류, 외출이나 면회금지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다 못한 연수생들은 다른 업체로 '탈출'을 감행하여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③ 미등록노동자 문제

■ 2003년 8월말 전체 이주노동자의 80%인 약 3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상태였고, 9월부터 두 달간 실시된 합법화 절차에 따라 18만 명의 미등록노동자들이 합법화되었고, 2004년 2월 현재 13만 9천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이다.

■ 한국정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해서 강제추방의 강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에 약 10만 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정책으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12명의 미등록노동자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이런 한국정부의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선별합법화와 나머지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대책 없는 단속과 강제추방에 반대하여 이주노동자 100여명

이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여 겨울과 봄을 지나 다시 여름을 맞고 있다.

④ 건강과 의료문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기술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인 만큼, 작업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작업지시 및 기계조작의 미숙 등으로 작업 중 산업안전사고(산재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병원비와 병원 이용의 어려움 때문에 작은 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다.

⑤ 폐쇄적 문화정책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 곧장 작업장에 배치되어 최소 2~3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또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어서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지어를 할 수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역시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고 보니, 작업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작업설명,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오해와 충돌도 발생하게 된다. 현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문화정책은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 생활습관 등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조건 적응하라'는 것이다.

3. 이주노동자 운동

1)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은 두 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축과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NGO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축이다.

◆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운동

1994년 산재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과 1995년 13명의 네팔출신의 연수생들의 농성을 시작으로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1995년 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 전국네트웍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JCMK)의 발족으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NGO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축이 형성되었다. 이후 NGO의 활동은 이주노동자의 개별적 인권 보호활동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활동이 그 중심활동이 되었다.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노동허가제 제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성과로 부족하긴 하지만 2003년 7월 고용허가제가 입법되었다.

◆ 이주노동자의 운동

2001년 4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평등노조이주지부)이 발족하여 활동 중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하나의 조직과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지역별로 국적별 공동체 조직을 통해 정보교류와 상호부조, 공동행동 등 수준에서 이주노동자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 미등록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집회 등의 다양한 실천경험이 있었고, 민주노총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의 한 부분으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과 조직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2004년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향후 과제

첫째,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 어디에서 일하던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제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확보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
-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서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둘째, 인간다운 삶을 위해

- 이주노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귀국 후 정착,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노동자 및 노동조합, 본국의 노동조합과 NGO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다.
즉 한국의 노동자들과의 연대, 자국의 노동자들과의 연대, 아시아의 민중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질의 응답

* 한국 내 농업 등, 다른 분야의 상황은 어떠한가?

- 한국은 산업국이어서 많은 사람이 공장 노동자이다. 농업, 수산업에도 노조가 있다. 최근 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 미등록체류자들만이 EPS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연수생은 받을 수 없는가?

- EPS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미등록체류자 중 180,000명이 합법화됐다. 한국 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중, 이들만이 EPS를 적용받는다.

* KCTU(민주노총)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평등노조(ETU : Equality Trade Union)가 KCTU 산하에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은 작은 규모이다.

* 마니 : 필리핀 내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있다. 하루에 2000명의 필리핀인이 해외로 이주한다.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처와 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연대를 해야 한다.

The Present Situation and Movemen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By Jeong Gue-sun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Pusan, Korea)

1. Th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The tendency of migrant working to head the developed countries is a natural phenomenon whenever the economical, national and regional gaps are exited as water flows from higher to lower part on earth and it happens more widely because of the rapid progres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 modern ages. Especially und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the capital moves the cheap labor power region and tries to import the same one from the countries. Because of the New Liberalism policy of maximizing the cheapest manufacturing process of goods, the life of homeland workers of the capital declines at the laboring condition and life quality, and also the life of imported workers become naturally unproductive. Worldwide, it is significant that the Asian people emigrants for migrant working and the growth of female workers increases rapidly.

During the developing period in the 1960's to 70's, Korea was a typical exporting country of migrant workers to earn US dollars, such as the construction workers to the Middle East Asia and miners and nurses to Germany. In the 1980's, the fast booming economy and the increase in wages produced the so called the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industries in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fisheries sectors. Instead of the Korean workers who did not want to work at the

hard labor fields, the migrant workers were imported informally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a result 400,000 migrants are in the Korean labor market presently.

◆ Present Data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s of February 2004, there were 400,000 migrants here in Korea.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stayed less than 4 years were allowed to be legalized partly aft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passed on July 30, 2003.

The census which was conducted for 2 months starting last September shows that 300,000(80%) were undocumented migrants on August, 2003 and it was decreased to 104,000(34.8%) in February, 2004.

Most of the migrant workers imported from 95 countries came from Southeast Asia. Especially, industrial trainees are from 17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Philippines. EPS allows importing laborers from 8 countries which also includes the Philippines.

2. Present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 Basic Policy of Korean Government on Migrant Workers

There are 3 categories:

First, Supplement Policy.

Basically only businesses with shortage in domestic labor can employ migrant workers.

Second, Short Term Rotation Policy.

The maximum term for migrant workers is only 3 years of legal stay.

Third, Single Worker Policy.

An individual foreigner who is allowed to work in Korea cannot invite his or her family members inspite of the UN Migrant Convention's acceptance of it. This policy is for the prevention of long term migrants to have a chance to apply for citizenship by another law.

b) Brief History of Korean Migrant Situation

■ The import of foreign labor started wit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TS) permitting oversea corporations and investigation companies to import local employees on October 26, 1991.

■ The present Industrial Trainee System settled down in 1994.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mport migrant worker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 Medium Sized Businesses (KFSB) with the reason of shortages of labor power in the 3D industries. It also allowed the importation industrial trainees from 27 labor sending agencies in 11 countries of Asia.

■ In 1996, the Korean civil movement groups including human rights associations organized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JCMK), the nationwide network of counseling and support groups for migrant workers. The main activity of JCMK is for the cancelation of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making the law of protection for migrant workers.

■ March 25 ~ 29, 2002,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o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Voluntary Reporting Program' as a part of the 'Total Project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Foreign Residents' whose main contained proposal was the extension of

deportation until March 31, 2003 and making an act for medium and long term projects within 6 months. As a result 255,000 undocumented migrants reported voluntarily.

■ March 31, 2003.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passed in the Korean Parliament which is a big step forward for a legal system but not clear enough as expected with the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which is so-called "Modern Slavery System". Moreover, human rights associations insisted the complete cancellation of the trainee system.

Presently the preparation of MOU and importing system is running with 8 countries including the Philippines for the start of EPS on August 17.

■ 184,199(80.9%)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registered for the EPS and legalization of below-4-years undocumented migrants up to 2005.

c) The problem of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① Distorted system

■ No Workers.

Migrants came to Korea without the position of 'worker'. They are under only two categories: trainee and illegal migrant, which means foreigners who came to Korea did not have a proper social position and rights as workers in the legal system.

Trainees cannot shift the working place and have to stay with the admitting training company. So that produces similarity as a slave labor staying only under imprisonment and wage seizure labor. Also undocumented workers under unstable conditions can not insist on the unlawful treatment in the company such as delayed payment 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example, an undocumented Vietnamese worker reported his employer of the delayed payment to the Ministry of Labor. On the day he received his delayed salary, the bad wishful company owner was accompanied by policemen who arrested the Vietnamese for compulsory deportation. Eventhough the employer did his duty to pay the delayed salary the migrant worker received compulsory deportation which is the worst case for a migrant worker.

It is a symbolic cas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t present. Th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are not provided for them;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xploitations happen occasionally.

② The wrong importing system to encourage illegal staying

The unreasonable policy on migrant workers of the Korean government produce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cause is as below:

■ The short working period, overload entry fee and corrupt agency.

To enter Korea as a migrant worker, there is a basic application fee from 3,000 to 10,000 US dollars for the employment agency and brokers. In most cases, migrant workers borrow the amount from relatives and banks, but they receive only 600~750 US dollars as a monthly salary. This amount is not sufficient to pay for the original fee for 3 years, even though they tried hard to save the wage. (Most of the time a trainee can receive the minimum salary as mentioned in the labor law but a certain trainee who is employed by oversea investigation companies cannot receive it.)

■ The poor working condition of training companies

A trainee who had contracted with the training company in the home country does not have a chance to change the original one, so thus he or she can not avoid the inferior working condition like delayed payment, seized passport(for prevention of running away), prohibition of interview and confinement. Sometimes a trainee can not bear the violation, and 'escape' to be an undocumented migrant.

③ The problem of undocumented migrants

■ At the end of August, 2003, 80 % (300,000) of migrant workers were undocumented and 180,000 legalized during two months from September. In February, 2004, data showed that 139,000 are undocumented migrants.

■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confidently the compulsory deportation of 100,000 undocumented migrants before the star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with the mobiliz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in the police station and immigration office.

■ It produces serious violations leading to harsh actions by the workers like the 12 suicides of migrants who had felt fear and despair since September 17,2003.

■ Under this condition more than 100 migrants staged a sit-down strike against the unreasonable regulation and compulsory deportation last winter at the Myeongdong Cathedral in Seoul.

④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The working field of migrants is mostly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under the safe guard line, so that sufficient protection is

limited, and also communication difficulty creates problem in the self-guard education.

Compared with domestic workers, migrant workers have a higher rate of industrial accident but the undocumented migrants do not have health insurance and fearful migrants try to avoid health checks and hospitalization. Sometimes it makes small diseases fatal.

⑤ Limited Cultural Education

Officially there is not any single chance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including language education program even though migrants start the work at the moment of arrival. Also the reduction of the cultural gap in the language, religion and social modes does not attempt yet before departure and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do not have certain capacity to provide for the education including local translators. Insufficient safe guard education produces higher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Further more the difference of culture makes unexpected accident(domestic and migrant workers fight rarely with the reason) but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is only 'Just adjust'.

3. The movement of Migrant workers

1) the Korean movement of migrant workers

Two main shifts of migrant workers' movement are Korean NGO support and counsel movement and the migrants themselves.

◆ Korean NGO Supporting movement

Sit-down strikes of migrants who had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in

1994 and 13 Nepalese trainees in 1995 made the Korean society concerned about the migrant workers. As a result,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JCMK) was organized as a nationwide network to support and counsel association.

The Korean NGO activity continued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and application of lawful policy as like withdrawing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Law for Migrant Workers' protection and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slightly imperfect EPS was realized as the result in September, 2003.

◆ Migrant workers' movement

In April, 2002 even though the Equality Trade Union Migrant Branch (KCTU) under the KCTU was organized and acted, it is too early to regard that the union's power is strong enough in the Korean society. But regional, national communities are rapidly growing to share the information, cooperation and co-activity and so on. Especially in 2002 and 2003 there were valuable experiences in the organizing of strong rallies for solving the undocumented migrants' registration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TU) consider the migrant workers as a domestic matter of irregular workers, so it is regarded a high possibility to organize strong migrant workers union from 2004.

2) The future

First, it is important to concern that the migrant workers have fundamental human rights.

■ Wherever they work, they are 'Workers' who have human rights and dignity.

- First of all, migrant workers have to receive proper protection from the legal system for their position and rights as workers.

- Migrant workers have to organize the Union for their identify as workers

- Not only for the workers but also the citizens of Korean society, the rights of society have to be increased.

Secondly, for wrathful life of human

- The program of settlement and family reunion is required after return to the motherland to prevent repeat migrant work.

- The exporting country provides enough chance to get stable life with family instead of unfair migrant work.

7월 4일 평가회

* 이영아 : 마니의 발표가 준비부족이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룹토의에서 주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웠다. 원래 주제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로 옮겨졌다. 공동의 목표가 서로 합의·이해되지 않았다.

* 최미경 : WAC 내에서 그룹토의주제에 대한 전달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 정귀순 : 마니는 지도력이 있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능력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세심한 준비가 부족해 아쉽다.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참 의미 있다. 토의 결과에 대한 토론시간이 없어서 아쉽다. 워크숍의 장소에 대한 고민과 좀 더 효율적인 차원의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 이귀보 :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으며 그룹토의 주제가 생소하다는 생각이다.

* 정국희 : 노조활동가의 적극적인 모습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룹토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쉬웠다.

(한국참가자들의 평가회 후, WAC와 SCW 활동가들과 함께 간단한 마무리 모임을 하고 마닐라로 출발하였다.)

<필리핀-마닐라>

2004년 7월 5일

오픈 포럼

-필리핀 엔지소와 함께

장소 : 바얀 Bayan Office

사회 : 마크

통역 : 이상아 (영어/한국어)

오후 2:00 참가자 소개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소개>

마크, 모경순(구미), 이영아(안양), 이귀보(아시아의친구들), 임성희(전주 노동자의집), 이지연(양산), 김민정(부산), 최미경(국제민주연대), 정국희(아시아의친구들), 이상아(국제민주연대)

린다, 쉘라, 차이, 마크(Mac), 마이따(Migrante International 마이그란떼 또는 미그란떼, 대부분 회원들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 미피(가브리엘라, 안양 센터에서의 워크숍에 참가했었다), 바얀 정당

2:10 방문목적 소개 - 정귀순

① 까비떼지역의 한국기업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실상을 듣고 문제점을 알아보고

② EPS에 대해 필리핀에서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실상과 이주노동자 운동

김민정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겠다. 긍정적인 두 가지 의미

1. 연수생 제도아래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노동자로 인정을 한다는 것
2. 송출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정적인 의미

1. 연수생 제도와 병행해 시행된다는 것
2.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독소 조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3.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400,000명의 미등록 중 180,000명이 합법화됐다.
 - 2004년 2월까지의 자진출국자들에 대한 재입국 우선권 약속과 남은 미등록자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농성을 하는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 엔지오의 4가지 과제를 가지로 있다.

1. 고용허가제가 긍정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잘 감시해야 한다.
2. 미등록 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를 위해 - 현재 한국 내 미등록은 150,000명에 달하고 있다.
3.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 현재 국적별 공동체나, ETU(평등노조) 등이 있지만 더욱더 활발한 조직화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귀환노동자들이 본국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지원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토론 주제를 제안한다.

1. 고용허가제를 감시
2.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귀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정보공유

질의 응답

*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마크 : 어떻게 단속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현재 6. 7월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고, 경찰과 함께 한달 중 10일 간의 강력 단속을 무작위로 하고 있다.

* 대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작년 11월부터 단속과 추방이 진행되자 한 목사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다른 교회나 단체들에서 단속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 작년 11월, 단속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고, 양산, 구미, 부산, 창원 등이 연대를 하고, 시위를 중단하면서 정부와의 한 가지 약속을 했다. 한국의 현 상황은 이주노동자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의해 뒤로 물러난 상태이다. 이것이 활동의 가장 힘든 부분이다.

* 정귀순 : EPS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송출비리를 없애는 것에 대해 가능하다고 보는가?

- 마이따(Migrante International 미그란떼 인터내셔널) : 우리는 계속 한국의 이주노동에 대해 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연수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와 미등록 노동자 양산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PS에 대해서는 미등록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해, 자진출국자에 대한 약속이 이행 될지도 의문이다. 연수제와의 병행 시행은 답이 아니다 라는 것은 발제를 한 내용에 동의한다. 작년 9월 에는 한국대사관 앞에서의 시위와 언론을 통한 운동도 했고, 금년에는 지난 6월, POEA(Philippines Overseas Employee Administration 필리핀해외취업관리청)가 100,00명의 공식적인 신청서를 받았다. 12.7%의 작년 실업률이 13.5%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필리핀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미디어를 통해 EPS가 어떤 법안인지에 대해 알리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미등록에 대한 단속을 모른 척 하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연수제가 시행되는 한 EPS는 맞지 않으면 필리핀 미등록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 한국의 엔지오와 함께 강제단속과 추방에 반대하는 연대를 하고 싶다.

- 가브리엘라 : 미그란테 인터내셔널과 함께 연수제 폐지에 대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성노동자 관련해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무책임한 필리핀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다. 엔터테이너 비자 관련해서 이것은 성노동자들을 막는 것이 아니고 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이를 감시하고 있다.

- (NCCP) 각 지역별로 연결된 종교단체로서 미그란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 모경순 : 연수제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송출비리가 근절되도록, 그리고 되도록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가? 고용허가제가 활용된다면 연수제는 없애지게 될 것 아닌가?

- 이주노동들, EPS에 신청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게 주목적이다. EPS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알리고 있다.

- (송출기관과 관련해) 송출회사의 문제가 크지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를 사유화하려고 한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런 비리가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필리핀 정부의 책임이다.

* 모경순 : 이에 대한 우려도 방문목적의 한가지였고, 이것이 근절되도록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떤가?

- 정부는 송출문제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문제점은 송출회사는 정부의 사유화의지에 있다.

- 불법적인 송출회사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비록 POEA에 의해 허가를 받은 송출회사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문제들이 자행될 것이다. 이것을 감시하고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통해 문을 닫는 등의 시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너무 느리게 진행됐다.

- 가브리엘라 : 필리핀의 상황악화로 인해, 현재 이라크까지도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상황이다. EPS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리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 이것을 완전히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 이영아 : 고용허가제가 부족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법안 추진이 된 상황 하에서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지금에 맞지 않다고 본다.

- 정귀순 : 이것도 노동허가제가 아니다. 그리고 연수제가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단지 첫 걸음이다.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고용허가제도 단지 시작한 시점이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엔지오 사이에서는 감시하는 것을 동의하고 연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와 필정부에 대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한국 내에서도 진행 중이고, 서로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

* Children of Migrant : EPS, 연수제 아래서는 노동의 상품화가 문제이다. 노동부 대표가 한국의 일자리를 가져왔다. 만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자랑하면 무엇하는가. 9천명의 추방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문제가 걱정스럽다. 9천명의 추방되면 이들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주노동자로 해외에 나갈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단체이다.

* BAYAN 정당 : 엔지오들의 감시활동에 대해, 국회내외의 활동에 대해, 국회 내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가?

-민노당은 선거당시 노동허가제를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정당보다는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으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평등이주노조가 민주노총 아래서 조직돼 있다.

7월 5일 4:00 토의 - 귀환 프로그램 (Reintegration)

마이따(Maita) : 4가지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필리핀의 정책은 인력을 수출하는 정책이다. 제도적으로 외채탕감을 위해 인력을 수출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서 17년째 인력수출에 힘쓰고 점점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정부가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 까지 진행하고 있다.

첫째, 운동의 배경을 말하고자 한다. 매일 3000명의 해외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두번째 포인트는 폐소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아로요는 정책을 펴고 있다. 1년에 1백 명의 인력 수출을 하겠다고 공식화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마이그란때는 해외에서의 침해 사례가 많아질수록 그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인권침해 사례를 지난 1월의 자료로 보자면, 994명이 돌아왔고, 38명이 물리적인 피해로, 32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의 정세가 신자유주의 등으로 변하고 있다. 내수산업이 성장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해외의 이주노동자들은 값싼 노동력이고, 필리핀으로 송금된 돈은 간신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그들은 돌아온 후 할 일이 없다. 필리핀 노동자가 귀환했을 때, 그들은 필리핀에서 살아갈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핸드폰을 팔거나 자동차를 팔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필리핀내의 경제가 그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의 예를 들자면, 기름값과 수리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다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나, 그들은 구체적 일자리에 대한 제공도 없고, 해외이주노동자들을 불러들일 정책이 없다. 그들은 한국 내에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었다가가 본국으로 돌아오면 세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의 정책은 인력수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귀환 프로그램이 없는

게 당연하다. OWC를 통해 귀환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는 빚을 늘리는 것이었다. 가게를 운영할 돈을 빌려주지만, 그를 운영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정책은 선거 두 달 전 급조한 정책이었다. “이 가게는 글로리아가 준 것입니다”라는 간판만을 준다. 이 자리에 있는 쉴라, 니올라, 미르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왔다.

정부가 진행하는 귀환 프로그램은 사업적이고 경제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귀환프로그램은 노동자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던 조직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그 조직화를 지원하고 가족들과의 조직을 통해 정보공유를 한다. 가족을 조직화한다는 것은 사업이나 가게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 탄압이나 추방의 경우 이를 이해시키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귀환프로그램을 말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정부의 인력수출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 정책에 의거해서 귀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한다.

역사적으로 소작농이나 토지개혁의 과정을 거울삼아 이 귀환정책도 가족과 함께 알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를 돌려서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온 귀환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쉴라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가족의 상황을 보자면 우리는 영구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수입도 충분하지 않고 나의 꿈은 가족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생계를 위한 충분한 수입을 원할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간 일했다.

니올라 : 쿠웨이트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고용주에게서 도주했다. 처음 돌아왔을 때 쿠웨이트 내 필리핀 정부 보호시설에 있었다. 물론 환경은 굉장히 나쁘다. 한 곳에 오백 명의 여성이 머물고 있다. 쿠웨이트는 아니

고 다른 나라로 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다.

질의 응답

* 정귀순 : 왜 귀환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가? 귀환 프로그램을 제안해 준다면?

- 미그란떼는 정부의 귀환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이다. 인력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은 노동자들의 국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것에 대해 무책임하다. 그래서 정부의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좋은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렇다. OFW나 가족들에게 조직화는 중요하다. 모두가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KMPP(Kalipunan ng Migranteng Pilipino at Pamilya)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Take care'라는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부모와 노동자와의 관계와 교육, 그리고 자녀교육 등 그리고 다른 단체를 조직하고 있다.

- 우리는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곳에서 기술 교육이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세우고 싶다.

*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교육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 'take care'에서는 조직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그 목적은 조직화에 있다.

* 한국에서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미그란떼는 필리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예를 들어 카사마코(KASAMMAKO 재한필리핀노동자공동체연대회의)같은 필리핀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어느 지점에서 한국의 엔지오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 하겠다.

* 모경순 : 귀환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와 연대하여 진행했는가?

- 미그란떼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역 노조가 조직되는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연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의 서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예전의 경험을 보자면, 다른 방법의 지원은 교회 공동체이거나 유럽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 캐나다의 교회 공동체와의 화상을 통해 진행해 본적도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는가?

- 가능하다.

- Bayan은 좀 다른 분야의 단체이다. 우리는 한국 내 미군주둔을 반대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한국인 참수에 대해 한국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7월 5일 오픈 포럼 평가회

- * 김민정(부산) : 미그란떼의 EPS에 대한 주장이 자신들의 색깔을 명백하게 내세우려는 인상이었고, 귀환프로그램에 대한 답답한 생각이 든다. 한 가지 주제 접근이 더 적절하다.
- * 이영아 : 기존 참여를 약속한 단체가 불참했다. 한편,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반면, 사례 부분에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이 든다. 1부 토론은 잘 이루어진 반면 2부의 토론은 잘 맞지 않는 생각이다. 연대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적극적인 면이 없었고, 원칙적인 접근과 강조가 있었다.
- * 정귀순 : 5개 단체가 참여했고, 한국정세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확인했다.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EPS 감시활동을 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중동 등지에 가정부로 가는 노동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대가 어렵다. 미그란떼는 정치적 색깔의 조직화가 강해서 귀환프로그램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다. 장기간을 두고 본다면 미그란떼 내에 한국담당이 마련돼야 연대가 가능하다.
- * 정국희 : 귀환프로그램 접근에 대해 조심성이 요구된다. 앞으로 시작지점에서 잘 접근해야 한다.
- * 이지연 : 오픈포럼에 대한 주제나 토론거리의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얘기가 오고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분위기가 아쉽다.
- * 모경순 : 미그란떼 등 이곳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들이 귀환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것은 확실하다. 귀환프로그램을 접근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 * 이상아 : 내용상 반복되는 것, 관심사가 다르다는 생각이다. 필리핀 내의 지역에 따라 NGO의 성격이 다르다. 해외인력 송출의 과정이 궁금하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 * 이귀보 : 이주노동역사가 길어서인지 나라별 공동체가 조직될 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면에서 인도네시아와는 다르다. 송출기관의 감시활동은

함께 할 수 있지만 귀환프로그램은 이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가족과의 관계개선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새롭다. 귀환프로그램은 한국 내 현지 노동자들과 상의해 봐야 한다.

- * 마크 : 자세한 프로그램의 사전 내용이 없었다. 귀환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늦어져서 미그란떼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좀 더 자세한 의견의 논의된 이후에 주제접근을 했어야 한다. 몇몇 단체가 불참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주노동당은 쿠웨이트에서 귀국하는 회생 노동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었고, KMU는 워크숍 때문에 불참했다.
- * 정귀순 : 오픈포럼에 대한 선명한 주제나 문제의식이 없었다. 마크씨가 고생 많았다. 만약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8개국 단체와의 워크숍을 갖고, EPS 감시에 대한 공유와 귀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야겠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가 필리핀에서 일해도 괜찮겠다. EPS 개정이나, WPS(Working Permit System 노동허가제) 입법이나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 내 엔지오들의 문제의식이나 고민이 부족하다.
- * 모경순 : 귀환노동자가 본국에서 엔지오 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 * 최미경 : 오픈포럼에 대한 주제준비가 부족했다. 다음 기회에는 단체 방문을 하는 것도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7월 6일 오전 : POEA앞에서 Rally 참여 및 POEA에 서한 전달

POEA에 전달한 서한

To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of the Philippines
cc.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From : Coalition of different NGOs in Korea
Date : 6th, July, 2004

As the spread of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movement of labor and capital is getting more actively. Especially, Neo-liberalistic capital freely imports the cheapest workforce and moves easily to find it. So, nowadays, violation of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and their suffering has become the most serious social issue.

Similarly, Korean Government treat migrant workers as cheap labor force through the so called Trainee System. For that reason, Korean NGOs have widely criticized the Korean Government for ten years, importation of labor started in 1991.

So, '2003 July, though it could not be the satisfied level but anyway new system that EPS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legislated. That is, it is significant that though the Trainee System, indicated as the most violating system of human rights', is not totally abolished, but, at least migrant workers will be able to be admitted as workers, applicable to Korean Labor Law.

Having ahead of enforcing EPS, proper enforcement of it is the important matter that directly connected with improving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that we, Korean NGOs as below.

For protecting human rights and interests of Philippine Workers, we ask you, DOLE and POEA that try to make positive efforts to improvement.

1. To scrape-out the corruption among recruitment agencies, it must be operated justly and opened clearly. There should be transparency in

the recruitment, selecting and sending process for Filipino migrant workers to Korea.

2. Korean Government has acted up to selectively legaliz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PS. While the rest of undocumented workers are excluded from legalization, Korean Government has suggested guarantee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voluntary leavers. That is, enforcing EPS at 2004, August, they must be guaranteed to reenter through EPS. So, we hope you to deal with keeping this promise.

3. We suggest that pre-education program must be established. Without any education of communicating in Korea, adapting to Korean Society, Korean Labor Law, concrete working skills, that migrant workers undergoing tough difficulties in Korea. So,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Korean workers and lots of accidents in working place, severe invasion of human rights like physical violence that pre-education of them must be put in operation.

4. One of the problems that EPS prohibits the migrant workers' to freely transfer on work place. Except from the unavoidable reason like shut down or closing or bankruptcy of their company, workers cannot move to the other workplace. This provision results in violation of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and worsens their working conditions. So, you may demand to Korean Government of reform it and fully make aware to Philippine workers the contents of it.

July, 6th, 2004

Migrant Workers' Center in An-Yang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Friends of Asia
Gumi Catholic Workers' Center
Yangsan Foreign Workers' House
The Women Migrants' Home
Association of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Busan

7월 6일 오후

필리핀 귀환노동자들과 간담회

날짜 : 2004년 7월 6일(화) 오후 1시30분~

장소 : 바얀무나(Bayan Muna 뜻: 사람먼저 People first) 회의실 (필리핀 마닐라)

사회: 정국희(아시아의친구들)

통역: 마크(영어, 따갈로그) / 이상아(영어, 한국어)

참석: 한국-정귀순(부산인권), 모경순(구미), 이귀보(아시아의친구들), 임성희(전주 노동자의집), 김민정(부산인권), 최미경(국제민주연대), 이지연(양산), 이영아(안양), 마크(아시아의친구들)

필리핀 귀환노동자 : 로넬 (남), 낸시(여 30대), 제니(여 20대), 로웨나(여 30대), 안테로(남 30대), 주아니또(남 30대), 로델리오(남 30대), 올라(여 20대), 크리스티나1(여 30대), 크리스티나2(여 30대), 채트, 로린다(여)

모두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함.

대부분 고용허가제 신청한 상태, 몇몇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 있음

- 사회 : 우리는 한국에서 온 여러 시민단체이다.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와 필리핀 까비떼 한국기업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했고 어제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단체를 만났다. 여러분들의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자 한다. 여러분께서 소개하실 때 한국에 얼마나 계셨고 언제 돌아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아시아의친구들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국희이다. (이후 한국참가자 각자 소개)

- 2002년에 돌아왔고 한국에서 7년 일했다.
- 1995년에 한국에 들어가 2001년에 돌아왔다. 한국에서의 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밤12시까지 일했다. 여기에서 직업 찾기가 어렵다.
- 제니이다. 5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고 2002년 돌아왔다. 남편은 아직 한

국에 있다.

- 로넬 : 한국에서 4년 일했다.
- 한국에 간적은 없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
- 낸시 : 불라칸(Bulacan) 지역에서 왔고, 외국에 나가 일하고 싶다.
- 채트 : 한국에 7년 있었다. 2003년 귀국해서 이곳에서 미그란테 인터내셔널 일 계속하고 있다.
- 불라칸에서 왔다. 한국에 가본 적 없고 고용허가제 지원한 상태이다. 이번 간담회 정보는 카톨릭 단체의 운전사로 있는 남편에게서 들었다.
- 사회 : 한국에서 돌아온 후 무엇을 하고 있고 상황은 어떻게 계획은 어떤가?

- 안테로 : 1995년 한국에 갔을 때 필리핀에서는 직업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연수생이었다. 울산에 화학공장에 있었다. 화학품은 건강을 악화시켰지만 열심히 일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 없이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다. 너무 힘들었다. 약 3년 정도 후 도망쳤다. 서울로 가서 아내를 만났다. 그녀 역시 공장에서 도망친 사람이었고 우리는 월곡동에서 4년 동안 살았다. 내 첫 아이는 칠삭둥이였고 병원비가 너무 비쌌다. 앰블런스로 고려대 병원에 갔고 병원비가 5천 달러 정도가 나왔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새 친구를 만나서 여러 공장에서 일했다. 좋은 공장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좋은 월급을 찾아 공장을 옮기고 싶었다.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 친구가 여기 한국에서 너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2001년 아내와 아이와 함께 돌아왔다. 제 생각에 나의 경험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아주 슬프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나는 그곳에서 고국의 가족들에게 많은 돈을 보내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 정귀순 : 돌아온 후 무엇을 했나?
- 부인과 라구나에 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직업이 없다. 그러나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과일과 코코넛나무 농사를 지었다. 지금은 2명의 아이가 있다.
- 주아니또 : 1995년 처음 한국 갔을 때 연수생이었다. 98년까지 일했고,

울산 대성회사에서 일했다. 그중 사장이 경제위기로 공장 문 닫았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필리핀상황이 일자리잡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들과 서울로 도망쳐 4년 동안 일했다. 한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 월급 안주면 일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장이 월급주겠다고 했다. 많은 회사들이 일하다가 공장 문 닫다가 하는 상황이라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했고 그냥 일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아내도 한국으로 일하러 와서 의류공장 에서 시다로 일했다. 2001년 아내의 삼촌이 죽고 아내는 힘든 삶과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때는 불법체류자에게 앰네스티(사면)가 없어 벌금을 내야했다. 그래도 아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아내는 당시 강제추방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지금도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언제나 필리핀에 있는 아내 걱정으로 일도 잘 되지 않았다. 그 후 사면 기간이 되어서 난 필리핀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직업이 없어서 힘들다. 첫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두 아이가 있다.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돈이 충분히 없어서 필리핀에 올 수 없었다.

- 채트 : 1994년 한국에 관광비자로 45,000페소로 갔다. 동두천시 양말공장에 있었고 월급 38만원이었다. (서울은 70만원이인데 비해) 그래도 필리핀공장과는 임금차이가 커서 열심히 일했다.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망가서 사장이 1십만원 월급을 더 주겠다고 했다. 1년 일하는 동안 내 임금이 하는 일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에게 연락해 서울 성수동에 가서 같은 직업으로 75만원 월급 받았다. 충분한 돈이었지만 문제는 사장이 월급을 제 때 주지 않았다. 2,3달째 임금이 밀려 돈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아 도망쳐 다른 공장으로 갔다. 여러 사장의 행태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그 중 한 사장이 내 필리핀 여성 동료를 희롱했다. 사장과 과장에게 그 여성도 가족이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했고 파업하겠다고 했다. 큰 논쟁이 있었고 문이 잠겨있어서 조그만 창문으로 도망쳤다. 어떤 사장은 한 사람의 필리핀노동자가 나가면 다른 필리핀노동자 부르면 된다고 했다. 성폭행은 한국에서 흔히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장이 노동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내를 만났고 서로 도왔다. 임신 8개월 반 중에 의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첫 아들은 죽었다. 사장은 나를 이해하지 않고 하루 결근한 것을 보고하

지 않았다고 나를 해고했다. 아내는 길거리에서 아이를 보면 울었다. 어려워지만 일을 해야 해서 다른 공장을 찾았다. 지금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그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면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다 똑같이 겪는 문제인데 어떻게 뭉치느냐가 중요하다. 다른 나라에 있는 필리핀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과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서 까사마코 산하 '한국필리핀이주노동자'조직에 들어가 싸움을 시작했다. 필리핀 정부가 취하는 행동에 대해 폭로하는 행동을 했다. 우리는 이주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 타겟을 누구로 잡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인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민주노총산하 평등노조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강제추방반대하고 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한다.

- 제니 : 1997년 한국에 갔다. 2주일 한국어 공부한 후 영등포 공장으로 갔다. 자수 잘했고 2년 동안 월급 70만원을 받았다. 임금인상 요구했으나 안 되어 다른 공장으로 옮겨 80만원 받았고 나는 일 잘해서 사장이 월급 깎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같이 간 남성노동자에 비해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사장에게 얘기했지만 사장은 여성이기 때문에 임금이 적다고 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심한욕설을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서 힘들다. 그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아들을 낳았고 4개월 후 (여기 있는) 마크편에 필리핀에 아이를 보냈다.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다가 아이가 보고 싶어 2002년 사면조치가 있어 필리핀에 왔다. 사장은 나에게 다시 초청장을 보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초청장 받았는데 한국대사관이 내 서류를 거부했다. 다시 임신해서 아이를 기른다.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 그 이유는 여기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아이들 학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한국에 남편이 수입이 없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두 아이가 있고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필리핀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한 경험은 없다.

- 로넬 : 1998년 경북에서 미등록으로 일했다. 공장은 좋았다. 1999년 친구가 더 높은 월급 주는 데로 가자고 제안해 구미에서 2년 동안 일했고

구미카톨릭센터에서 모경순선생님 만났다. 단속 나올 경우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숨을 수 있었다. 필리핀의 아내가 보고 싶어 귀국했고 지금은 5개월 된 아이가 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한국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가 궁금하다.

- 로웨나 : 옆사람과 시누이 올케사이다.(옆에 앉은 사람이 오빠의 아내) 오빠는 필리핀으로 돌아왔다가 한국으로 다시 가서 일해서 전체 9년 동안 일했다. 여러 번 공장을 옮겼다. 임금주지 않아서 옮긴 경우 많다. 뒤에 앉은 채트와 같은 공장에 있어서 경험이 비슷하다. 나는 현재 아이가 3명이고(쌍둥이와 아이1) 집이 전세라 교육비와 집값 문제가 커서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 브로커를 만났는데 비리가 많아 정부에 등록증을 빼앗기게 된 회사이다.

(10분휴식)

- 처음으로 EPS 신청한 사람 : 처음에 라디오에서 정보를 듣고 한국정부가 올해 8월까지 3만 명을 고용할 것이다 라고 하여 곧장 신청하게 되었다. 여권, 신원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아들은 10세이고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상태였고 특수학교 교육비가 1년에 20만 불이다. 딸도 질병을 안고 태어나서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수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운전하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부족하다.

- 사회자 : 어디에서 신청했나?

- 불라칸에 있는 POEA산하 지방사무소에 가서 신청했다. 직장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었다. 일본에도 알아봐주겠다고 했는데 안 되었고 이번에 한국에 신청한 것이다. 신청했다는 증서를 주고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

- 이영아 : 한국에 간다고 확정이 된다면 드는 비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

-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들것이라고 했다. 신청비용은 없었다.

- 영아 : 신청한 곳이 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곳인가?

- 그렇다. Public Employer service center 이다.

- 한국 : 고용허가제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들은바가 있나?

- 확실히는 아니지만 3년 정도 머물 것이고 8백 달러 정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8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8월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선발기준에 대해 들은바 없지만 나이제한은 40세이다.

- 사회 : 한국에서 일한 경험을 신청서에 다 적었나?

- 안테로 : 미등록으로 일한 게 안 좋게 작용할까봐 두려워 합법적인 기간 3년만 적었다.

- 마크 : POEA산하 기관이 각 지역별로 많이 있고 한 지역별로 수천 명이 신청을 했을 것이다.

- 귀순 : 고용허가제 관련 질문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대답하자.

- 필리핀(이하 필) :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됩니까?

- 필 : 얼마의 임금을 받게 되나?

- 필 :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이 있는데 신뢰할만한 곳이 없었다. 정부에 문의해도 우리를 무시한다.

- 민정 : 한국에도 최저임금제도가 있고 1개월에 하루 8시간 일하고 56만 7천원으로 약 4백 달러 정도이다. 한국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은 이 금액을 받아야 한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 월급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본다. 한국노동자들은 대부분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8,90십만 원 즉 800달러 정도 받을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허용되는 업종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 농축산업 일부, 건설업 일부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필 : 지금 우리가 한국정부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이 신뢰할 만한 정보입니까?

- 민정 : 다른 제도와 다른 것은 정부 대 정부로 협정을 맺어 필리핀노동자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게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

- 필 : 정부를 통하지 않는 다른 에이전시도 있나?

- 민정 : 정부를 통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적 브로커가 여전히 거짓 정보로 불법적으로 사람을 모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곳

에 온 것은 송출비리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신청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같이 해보고 싶다.

- 필 :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8월까지 단지 기다리는 것인가?

- 민정 :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얘기한 다음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얘기하자. 고용허가제가 작년에 한국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필리핀 포함 8개 국가와 MOU를 맺었다. 태국,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004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전체 숫자는 25,000명이다. 취업기간은 최고 3년이고 1년마다 재계약되어야 한다. 한국어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2005년 8월부터 적용된다. 고용허가제의 의미는 하나는 이주노동자를 정식법적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연수생제도는 노동법적용을 받지 않았다. 두번째 의미는 정부와 정부가 외국인력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첫째는 연수생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고용허가제에 지원했지만 지원자가 회사를 선택할 수 없고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다.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므로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1년 계약만 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최고 3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상태로 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필 : 성폭행이나 노동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공장을 바꿀 수 없나?

- 민정 : 이의제기 할 수 있다.

- 과거에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민정 : 물론 지원할 수는 있지만 2003부터 2004년 2월까지 자진출국한 사람만 먼저 가능성이 있다.

- 필 : 한국에 있는 사장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면 POEA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나

- 민정 : 필리핀에서 정보를 한국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사장들이 그 정보를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나 위 질문에 대해 최근 노동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확답은 없었다.

현재 한국이주노동자상황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다. 현재 14만 명의 미등록체류자가 있다. 이것은 많이 줄어든 수치로 작년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전체 미등록체류자의 80%가 합법화된 이후 남은 숫자이다. 합법화된 노동자도 6개월에서 2년 정도만 머무를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어 직종이 안 맞거나 성추행이나 노동문제가 제대로 해결

되지 않은 경우 미등록체류자로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해 계속 강제추방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1달에 10일씩 단속을 하고 있었다. 한국 미등록노동자들은 강제추방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등록, 미등록 노동자들이 함께 이 운동을 벌이고 있고 300일 정도 농성을 하고 있다.

- 필 : 고용허가제가 시작되면 어떻게 한국에서 사람을 고르나?

- 민정 : POEA에서 한국노동부로 지원자 정보를 보내면 한국정부는 사업주들에게 직접 정보를 보여주고 사업주들이 직접 고른다.

- 이귀보 : 한국사업주는 한국인고용노력을 한 후 외국인인력을 신청한다. 한국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 지원자 정보를 갖고 있다가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사람으로 5배수 추천을 한다. 그러면 사업주가 고른다.

- 정귀순 : 직접 공장 선택할 수 없다. 문제가 있으면 한국 내 지부에 다시 신청해서 기다려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원자들이 서로 모임을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필리핀 정부에 문의해라. 우리는 한국정부에는 요구할 수 있지만 필리핀 정부에는 요구할 수 없다. 지금 우리의 만남이 첫 걸음이다. 누군가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좋다. 예를 들면 마크나 크리스티나 (마크: 미그란떼 인터내셔널에도 연락할 수 있다.)

- 사회 :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